

## 우리사회의 소득이동성의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I 요약

#### 1.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의 관계

-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계층 간 간격을 확대시킴으로써 개인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인 소득의 이동성을 약화
- 사회계층간 낮은 소득이동성은 다음 세대 인적자본의 투자(교육, 훈련, 경험, 도전 등)로 전이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킴

#### 2.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 최근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0~2014년 감소하였던 소득 불평등도 지니계수가 2015년 이후 점차 증가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빈부간 격차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소득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의 불평등이 높아졌기 때문

#### 3. 지표를 통해 본 소득이동성

-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소득계층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본 결과 최근 소득이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동성 지표인 Shorrocks index의 경우 2001~2007년 0.74에서 2010~2016년에는 0.64로 하락
  - 소득의 상향이동정도를 보여주는 Fields & Oak 지표의 경우 2001~2007년 0.29에서 2010~2016년에는 0.19로 상향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4.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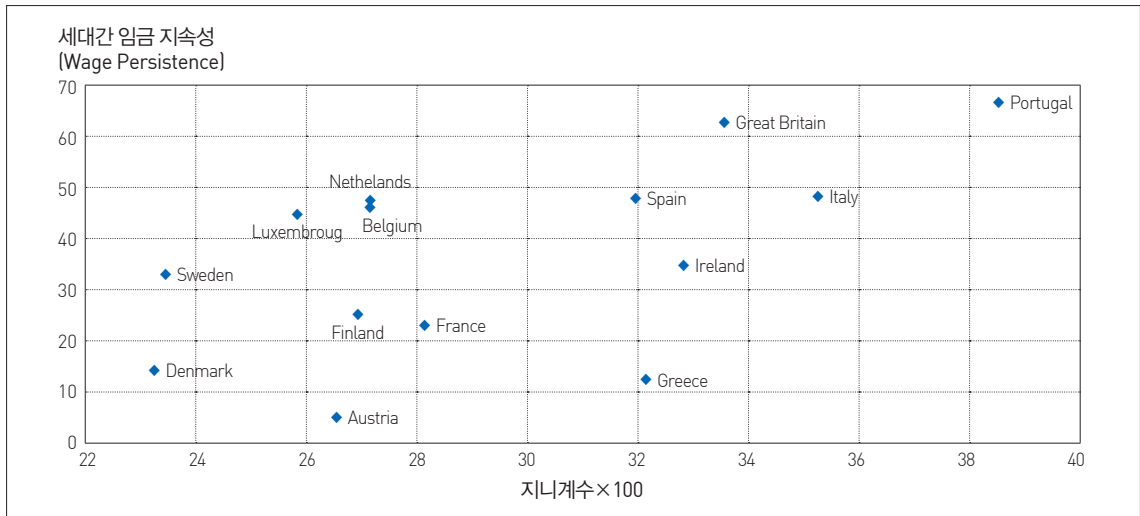
-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인한 소득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세 및 재분배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의 관계

### ■ 소득불평등, 생애 소득이동성 및 세대간 이동성의 관계

- 우리사회의 소득이동성이 약화되고 있을 원인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현상이 거론
  -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간격을 확대시킴으로써 개인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인 소득의 이동성을 약화
- 사회계층간 낮은 소득이동성은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 투자(교육, 훈련, 경험, 도전 등)를 어렵게 함으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킴.
  -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은 개인의 생애 소득의 이동성과 세대간 이동성을 약화시키면서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는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 \*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도와 세대간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

[그림 1]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의 관계



주: 남자 35-44세 대상.  
자료: OECD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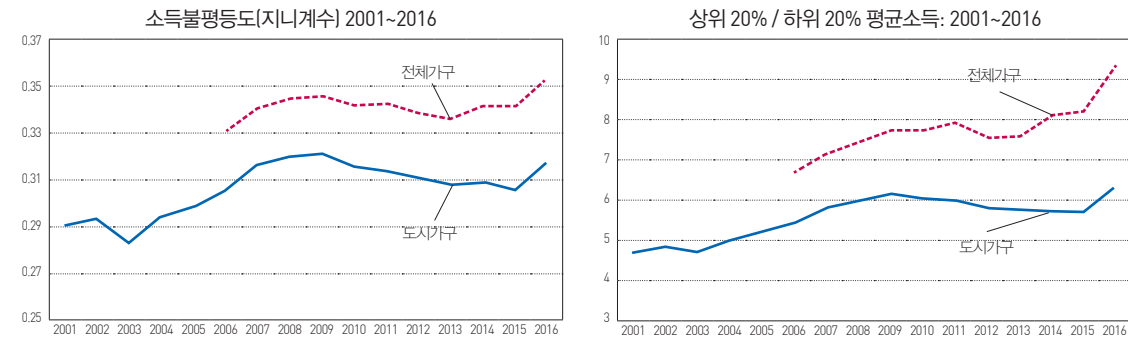
## 2.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 ■ 최근 소득불평등도와 관련된 지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0~2014년 감소하였던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가 2015년 이후 점차 증가
  - 전체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201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추세가 2018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빈부간 격차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소득의 배율은 2006년 6.65에서 2016년 9.32배로 가파르게 증가

[그림 2] 소득불평등도와 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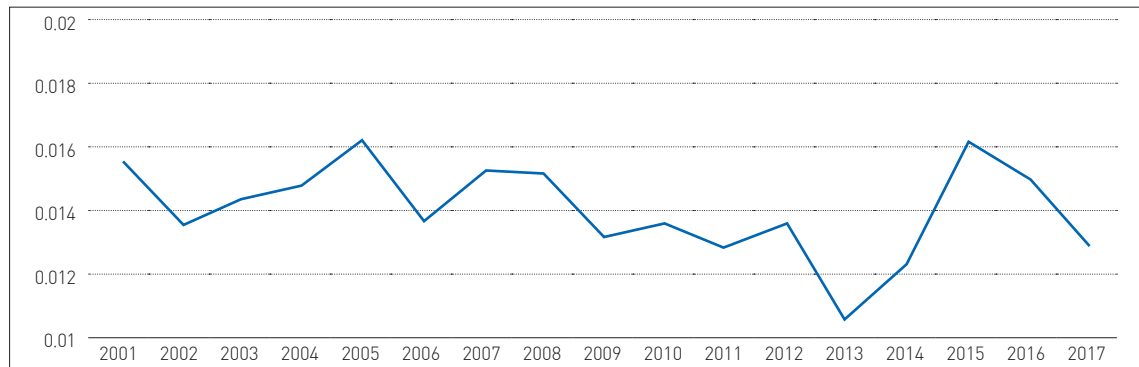


주: 도시가구는 2인 이상 도시거주자 대상,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시장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 ■ 소득불평등 증가는 소득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의 불평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에 따라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는 달라짐
  - 가령, 학력 간 임금격차의 확대나 개인소득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 부분(예: 월급)에 의한 불평등의 확대는 학력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하거나 상당기간 소득불평등을 고착화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반면 소득불평등이 변동성이 심한 소득 부분(예: 상금, 경조사비 등)으로 말미암을 경우 시간의 흐름과 함께 불평등 현상은 사라지고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됨
- 학력집단 간 임금불평등은 2000년대 이후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학력간 불평등의 추이



주: 1) Generalised Entropy Index(Theil Index)로 임금의 불평등도를 측정함.  
 2) 월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연간특별급여/12)/총근로시간으로 정의.  
 3) 정상근로시간이 월 15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표본으로 한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의 불평등은 증가한 반면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심한 부분의 소득 불평등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 2001~05년과 2007~11년을 비교할 때, 소득불평등(분산)이 0.563에서 0.579로 증가한 가운데 일시적 소득요인에 의한 불평등은 감소(0.190 → 0.157)한 반면 지속적 소득요인의 불평등은 증가 (0.373 → 0.422)
  - 소득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의 불평등은 증가로 인하여 소득계층 이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한계에 직면하면서 소득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소득불평등(분산) 요인분석: 일시적 부분과 지속적 부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 2005, 2007, 2011.

### 3. 지표를 통해 본 소득이동성

- 비교적 장기간(7년)에 걸친 개인이 속한 소득계층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 소득이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표 1]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2001~2007년 2010~2016년 두 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이동성을 분석함
    - 패널자료 특성 상 표본의 연령 증가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2001년과 2010년 각각 분석대상 표본을 30-55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들의 6년 후 소득계층 이동을 비교
  - 분석결과, 시작연도와 마지막 연도의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었던 표본의 비율이 2001~2007년에 비해 2010~2016년 기간에 그 값이 대체로 크다는 점에서 최근 소득이동성이 낮아졌음을 시사
    - 가령 2001년 소득최하위 계층(Q1)의 35.56%는 소득의 상승이동 없이 2007년에도 동일한 최하위 계층에 머물렀으며, 2010~2016년의 경우 그 값이 41.33%로 증가하였음

[표 1] 소득이행행렬

(단위: %)

2001 ~ 2007년						2010 ~ 2016년					
2001년	2007년					2010년	2016년				
	Q1	Q2	Q3	Q4	Q5		Q1	Q2	Q3	Q4	Q5
Q1	35.56	32.22	14.44	10.25	7.50	Q1	41.33	30.31	15.22	8.75	4.38
Q2	6.70	16.63	22.33	34.00	20.35	Q2	7.38	17.35	28.42	33.62	13.23
Q3	1.69	7.61	16.62	33.53	40.56	Q3	5.25	6.92	15.04	44.87	27.92
Q4	1.13	2.63	7.89	18.42	69.92	Q4	1.97	4.19	4.43	32.76	56.65
Q5	1.06	4.26	2.13	6.38	86.17	Q5	0.95	1.27	2.85	11.39	83.54

주: 1) 값은 각 행렬의 구성비(row-shares, %)를 나타냄. 반올림 과정에서 합계가 100이 아닐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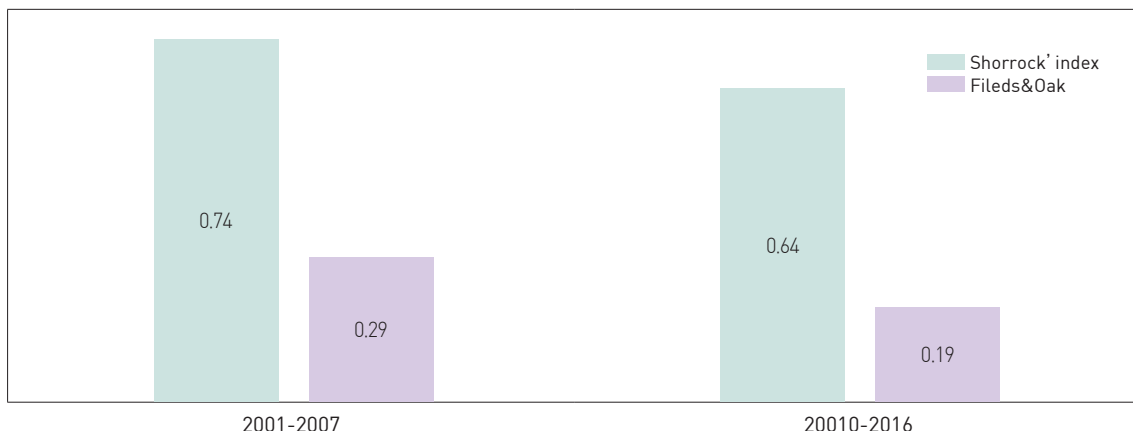
2) 2001과 2010년 기준 30~50세로 연령제한.

자료: OECD data.

■ 소득이동성에 대한 지표는 2010년 이후 소득이동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소득의 상향이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5]

- 소득이동성의 대표적 지표인 Shorrocks' index는 2001~2007년 0.74에서 2010~2016년에는 0.64로 하락함
- 한편 이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Fileds&Oak 지표를 계산한 결과 2001~2007년 0.29에서 2010~2016년에는 0.19로 상향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소득불평등(분산) 요인분석: 일시적 부분과 지속적 부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01, 2007, 2010,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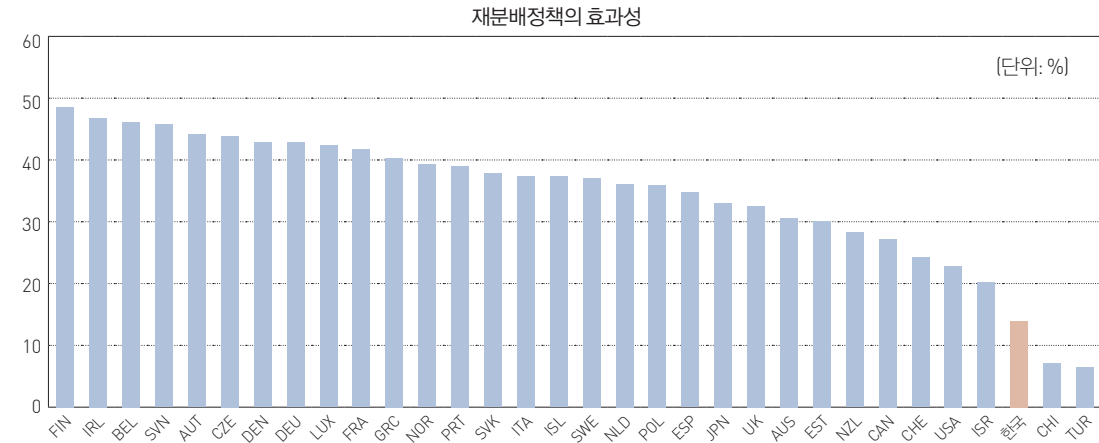
■ 종합하면, 최근 소득이동성은 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부분(예: 월급)에 의한 불평등의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며, 소득의 상향이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임

## 4.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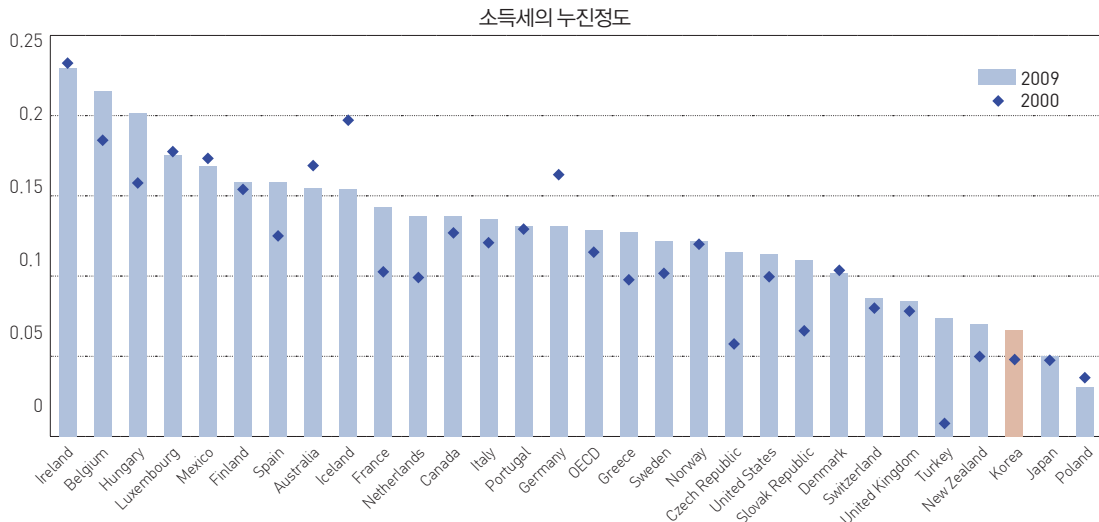
### ■ 소득불평등의 확대로 인한 소득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세 및 재분배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함[그림 6]  
-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시장소득 불평등도와 가처분소득 불평등도 차이로 측정되며 그 차이는 재분배 정책(조세, 이전소득)의 효과성에 따라 결정됨
- 취약한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높은 면세자 비중(2016년 43.6%)과 소득세의 낮은 누진성에도 기인함
-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의 재원확충을 위한 조세제도의 재검토가 필요

[그림 6]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성과 소득세 누진성 국제비교



자료 : OECD Stat.



자료 : OECD(2009) "Taxing Wages 2008".

■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학력의 열세가 능력에 의해 극복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 저학력계층의 소득수준을 정체시키는 원인인 학력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격되는 학력별 임금격차가 과연 합리적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나아가 저학력이 노동시장에서 낙인(stigma)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직업훈련·능력개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배려하고 확충해 나감으로써 이들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숙련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함
- 한편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벽을 허무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임
  - 최근의 공공부문 중심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경유하여 정규직으로 경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아울러 현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국책연구전략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9층  
Tel 044-211-1000 Fax 044-211-1398 www.nrc.re.kr

